"신속하게 심리하되 전체 살펴 보겠다" … 결정 늦어지나

헌재, 박대통령 탄핵 첫 재판관회의

전담 재판관 2~3명 지정 … 변론 기일 정해

헌법연구관 20여명 참여 '탄핵심판 TF' 가동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되 소추사유는 전체적으로 따져보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헌재는 12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다음 주 변론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 2~3명을 내주 지정한다. 준비가 끝나면 변론기일을 정한다.

이와함께 헌재는 탄핵심판 소추사유 가운데 일부 사유만 떼어내 선별적으로 심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신속히 심리를 진행하되 전반적으로 소추사유는 전체적으로 따짐으로써 절차적 정당성 등을 확보하고 충실한 심리를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일각의 주장처럼 일부 사안만 떼어내 너무 이른 '조기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준비절차란 변론에서 심리를 집중적,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미리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헌재법상 헌재는 준비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

사건이 복잡할 경우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고 난 뒤에 효율적 변론을 하기 위해서다.

헌재 실무상 재판장(소장)은 통상 2~3명의 전담 재판관을 '수명 재판관'으로 지정해 준비절차를 맡긴다.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은 준비절차기일을 지정해 당사자의 대리인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미리 청취하고 쟁점을 정리한다. 헌재는 전담 재판관이 정해지는 대로 2~3차례 준비절차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변론을 준비할 방침이다.

헌재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때는 별도의 준비절차 없이 바로 변론에 들어갔지만, 이번 사건은 쟁점이 복잡하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에서 준비절차 기간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국회와 법무부에 각각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헌재법은 심판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의견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개인은 헌재가 정한 기한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 사건 때는 국회와 법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당시 국회는 탄핵심판 인용 의견을, 법무부는 기각 의견을 각각 낸 바 있다. 선관위는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답변만 보냈다.

심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헌재는 소속 헌법연구관 20여명 안팎으로 구성된 탄핵심판 전담 태스크포스(TF)팀도 가동하기로 했다.

한편 헌재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탄핵 소추사유 선별 심리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탄핵심판은 변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하는 쟁점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별적 심리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선별 심리 여부와 관련해 "소추사유를 (여러 개) 주장했는데 판단을 안 할 수 없다"며 "청구인이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은) 왜 안 하느냐고 그럴 수도 있지 않으냐"며 "우리가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헌재 측은 "심리를 신속히 하기 위해 준비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출근하는 강일원 주심 재판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는 첫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향후 심판 절차와 기일 지정, 진행 방법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의혹 풀까

국조특위, 간호장교·김상만 전 원장·주치의 등 증인 채택

내일 최순실 3차 청문회

14일 열리는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는 이 청문회에서 박 대통령의 진료를 담당했던 의료진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 청와대 내 '비선 진료' 행태뿐 아니라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조특위는 구체적으로 당시 청와대 의무실에서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모 대위와 신모 전 대위, 이병석 전 대통령 주치의, 김원호 전 대통령경호실 의무실장 등 1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알 가능성이 있는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도 불렀다.

12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3차 청문회의 쟁점은 ▲자문의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 전 원장의 역할 ▲박 대통령이 받은 시술 종류 및 진료 공간 ▲주치의와 자문의 공조 여부 ▲청와대 구매 의약품 사용처 ▲청와대 의료시스템 보안 문제 등이다.

특히 국조특위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질문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3차 청문회에서는 김상만 원장이 '키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은 박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과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이 자문의로 위촉한 적이 없음에도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자문의 명단에 포함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자문의는 통상 주치의와 친분이 있거나 주치의 소속 의료기관 교수가 선임된다.

김상만 원장은 박 대통령 진료를 청와대 의무실이 아닌 대통령 관저의 '파우더룸'에서 한 적이 있다고 밝혀 '의료 게이트' 의혹이 일기도 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다음날인 15일 열리는 4차 청문회에 30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을 증인으로 불러 이른바 '정윤회 문건'과 정유라씨 특혜 의혹을 캐물을 계획이다.

또 오는 16일 오전엔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을 현장 조사한다. 이 자리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머리를 손질한 정모 미용실 원장도 참석시킬 예정이다. 이어 오후엔 대리 처방 의혹을 받고 있는 차움병원과 김영재 의원에 대한 현장조사도 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靑 수석 업무보고 …

광폭행보 나서는 황교안 권한대행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본격적으로 민생현안을 챙기면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12일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와 조류인플루엔자(AI) 관계장관 회의를 잇따라 개최했으며 청와대 수석실 업무 보고를 받았다.

또 정책의 연속성을 이유로 경제 컨트롤타워로 '유일호 경제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14일엔 국회를 방문,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등을 챙겼다. 취약계층 지원 대책과 AI대책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면서 '민생'에 중점을 뒀다. 국방, 외교가 급격하게 흔들리지 않은 것을 확인한 황 권한대행이 민생을 본격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날 처음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역시 안보·경제·민생·국민안전 등 4대 역점 분야의 시급한 현안과제를 선정해 논의했다. 황 권한대행의 첫 지시사항은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취약계층 지원 대책'이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청와대 수석실별로 담당업무와 현안에 대해 업무보고도 받았다. 청와대와 수석실로부터 긴밀한 업무협조를 받아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다. 일각에서는 수석실 업무까지 챙기면서 예상보다 적극적인 권한대행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황 권한대행은 고건 전 권한대행보다 훨씬 적극적인 행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써 일부 인사는 직접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의 적극적 광폭 행보는 거대야당과의 마찰을 빚을 수 있어 황 권한대행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野 "유일호 경제팀 유지는 일방적 권한행사" 비판

민주당 결론 못내려

야3당 오늘 입장 조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2일 경제 정책 컨트롤타워로 '유일호 경제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자 야권은 일단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권한 행사"라고 반발했다.

국민의당으로부터 '백지위임'을 받은 민주당이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유일호냐 임종룡이냐'를 놓고 격론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일견 정부에 뒤통수를 맞으면서 경제부총리 인선 문제의 주도권을 빼앗긴 셈이 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내부에서 '임종룡 불가론'이 확산, 지도부도 '유일호 카드' 불가피론 쪽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아가던 터였다. 따라서 '어정쩡한 비판' 수준에서 지나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야권이 지난달 2일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 인선이 이뤄진 뒤 '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경제컨트롤타워 문제를 방치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야3당 대표는 13일 오후 만나 경제부총리 문제 등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조율할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